

# “차액가맹금 돌려달라”... 프랜차이즈 업계, 법적분쟁 확산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분쟁 법원, 가맹점주들 손 들어줘 치킨·피자 등 유사소송 잇따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마진을 붙여 받는 ‘차액가맹금’을 돌려싼 법적 분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치킨·피자·커피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본사는 브랜드의 품질 유지와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점이 특정 품목을 본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취하는 마진이 차액가맹금이다. 업계에서는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명시적 조항이 없거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다.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피자헛 본사가 210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피자헛 가맹점주 대표단

지난 1월 bhc·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총 744명 반환소송

롯데 슈퍼·프레시, BBQ 점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나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피자헛 본사가 210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소송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1월, bhc치킨 가맹점주 327명과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이 각각 bhc와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교촌치킨 점주 247명도 가맹본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점주들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점주들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섰다.

지난 6일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 점주 68명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6800만원 규모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굽네치킨, 두점, 파파존스, 푸라닭 등의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가맹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다. 지난해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명시적 조항이 없으며, 본사가 매달 일정 비율의 로열티(총수입의 6%)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차액가맹금을 취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사전 합의가 없었고, 점주들이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피자헛의 사례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와 다르다”며 “대다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일정 비율 이하로 책정하여 점주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차액가맹금 소송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이 법적·사회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사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본사와 점주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보다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도한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차액가맹금의 명확한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차액가맹금 비율은 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커피(6.8%), 제과·제빵(5.5%), 피자(4.2%), 한식(2.7%)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소송이 계속될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을 제한하면 본사는 수익 모델을 다각화할 것이고, 오히려 다른 면에서 가맹점주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oul.co.kr

## 반도체 연구직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정부·여당 ‘반도체특별법’ 불발에 특례 신설... 6개월 추가연장 가능 야당, 타 분야 근로시간 확대 우려

반도체 연구직에 최대 주64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회당 인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연구개발 업무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장관 인가를 받아 현행 주 52시간 근로에 더해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그러나 회당 인

가 기간이 3개월로 짧고, 추가 연장 심사가 까다로워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활용이 힘들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자,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우선 강구하기로 하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다른 분야 근로시간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을 추가 연장 가능토록 하는 특례를 신설, 필요에 따라 현행(3개월 단위 추가연장) 제도와 특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은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 64시간, 나머지 3개월은 주 60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한다. 현행 1회 3개월 인가 선택시엔 3개월 후 재심사를 받는 대신, 계속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추가 인가를 위한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되고, 인가 사유, 인가 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한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로, 특례 활용 시 근로시간 연장 인가 기간 중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만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특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별도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제정하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번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여야 입장차에 ‘반도체 특별법’ 무산 산업의 특성 고려해 특례 신설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핵심인력 자유롭게 연구여건 절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 ‘환영’... 조속한 입법 요청 “반도체 연구개발역량 강화 방안 연구인력 역량 키울 수 있게 해야”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경제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만큼 주 52시간



예외 내용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도 논평을 통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금번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환영의 뜻과 함께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당부했다. 경총은 “이번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서예진·양성운 기자 syj@

## 제조업 수출·내수 18개월 새 최대폭 감소

>> 1면 ‘긴급점검, 이제 내리막...’서 계속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수출용 출하가 전월대비 무려 10.3% 곤두박질쳤다. 내수에서도 2.4% 감소했다. 수출과 내수 합쳐서 6.2% 줄었는데 이는 최근 18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재고용(출하 대비 재

고) 역시 110.1%로 전월보다 6.5%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1월에도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후퇴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산업생산이 2.7% 줄었는데 그중 기계장비(-7.7%)와 전자부품(-8.1%)에서 후퇴의 폭이 컸다. 올해 1월 설비투자는 14.2% 감소했다. 기계류(-12.6%)와 운송장비(-17.5%) 등이 전반

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6%만큼 뒤걸음 질렀다. 각 가구는 특히 의복 등의 준내구재(-2.6%) 소비를 줄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업황은 바닥을 못 벗어나고 있다. 지난 2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 명 넘게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건설기성’ 통계는 지난 1월 전년동월 대비로 27% 가량 급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